



지역혁신사업 관리 현황 설문조사결과 및 시사점

이민형*

1. 서언

최근 정부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말 현재 정부가 지역혁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지원사업, 지역혁신역량 증대를 위한 지방대학 육성 사업(NURI), 지역의 전략사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 TP, TIC, RRC 등의 기술혁신센터 지원사업 등으로 모두 23개 사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산업자원부를 비롯해 교육부, 과기부, 문광부 등 9개 부처 등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원 내용도 인력양성지원에서부터 단지조성 및 시설, 장비지원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 지원, 연구개발지원, 혁신협의회 구성 지원, 기술이전 및 창업지원 등의 소프트웨어 지원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여러 부처에서 추진됨에 따라 사업간 중복 및 시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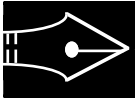
부족 문제 등 사업관리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지원사업의 확대에 따라 지원예산규모도 매년 크게 증가하여 2005년 지역혁신사업예산은 1조 3천억원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예산지원규모의 확대는 정부예산투자의 효율성 제고라는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역혁신시스템은 발전단계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어 정부의 지역혁신정책은 관리의 효율성 제고보다는 정부의 지원확대를 통한 지역혁신역량제고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확대 차원보다는 성과지향적인 관리의 효율성, 효과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혁신사업들의 관리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사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 조정 및 사업추진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현재 추진되

*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에서 조사된 내용을 재분석한 내용임.

* 기술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e-mail: sjsohn@stepi.re.kr)



고 있는 지역혁신사업들의 관리의 효율성 수준에 대해 지역의 혁신주체들의 시각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사업추진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정부의 지역혁신사업 추진 현황

참여정부의 지역혁신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지역혁신 관련 사업들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정책이 수립되고 관리되어 왔으나 2005년 1월 1일을 기해 정부는 여러 부처에서 일반회계 및 다수의 특별회계를 통해 분산 추진해 온 지역개발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지역혁신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다음과 같은 방향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첫째,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와 기본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을 위해 국고지원중인 지역개발 및 혁신 관련 사업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둘째, 예산 집행과 관련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의 전용 및 이월 허용범위 등을 확대한다. 셋째, 지역발전 시행계획의 실적을 평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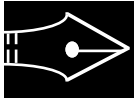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넷째, 수요자인 지방의 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사업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사전에 지자체별 지출한도를 부여하여 그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역혁신사업의 경우 지역 스스로 수립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바탕으로 계획과 예산간의 연계 강화(plan-oriented)를 추진한다는 것 등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규모는 출범 첫해인 2005년에는 약 5조원 규모로 운영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개발사업계정에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이 편입되었으며, 지역혁신사업계정에는 지역혁신과 관련하여 출연, 융자,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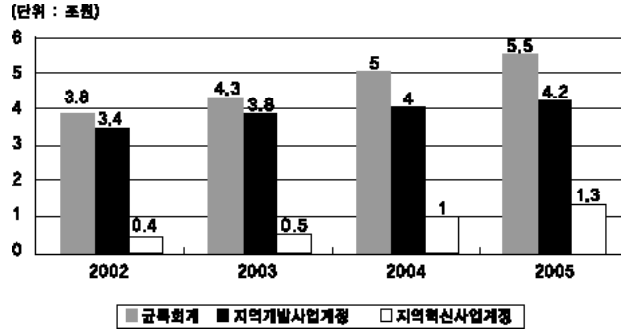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02년 3조 8천억 규모에서 2005년 5조 5천억 규모로 증가하여 연평균 1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계정별로는 지역개발사업계정이 4조 2천억원, 지역혁신사업계정이 1조 3천억원을 차지하고 있다¹⁾. 특히 지역혁신사업계정은 2002년에서 2005년까지 예산규모의 증가율이 평균 68%에 이르는 큰 폭의 증가율을

〈표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 사업

지역개발사업 계정(규특법 제34조 제2항)	지역혁신사업 계정(규특법 제35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보조금중 지역개발 관련 사업 전체 -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 지역의 문화·예술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 지역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 - 기타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국가직접사업·융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혁신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융자 - 지역혁신체제(RIS)의 구축 및 활성화 -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 지역 과학기술의 진흥 및 특성화 -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의 진흥 -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



〈그림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추세



보이고 있어 지역혁신관련 사업예산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지역혁신사업계정에 속한 사업의 종류와 각 사업의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현

재 9개 정부부처에서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예산규모는 사업당 5억원에서 2200억원까지 사업별로 다양한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인 부처별 사업명과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2〉 지역혁신사업 종류와 예산 규모(2004년 4월 기준)

(단위: 백만원)

순번	소관	사업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	산자부	4개지역 2단계 진흥사업	-	-	120,000	180,000
2	산자부	9개지역진흥사업	600	102,300	114,500	180,000
3	산자부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	-	50,000	65,000
4	산자부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	-	-	30,000	30,000
5	산자부	테크노파크(TP) 조성	30,000	40,000	20,000	20,000
6	산자부	지역기술혁신센터(TIC)	28,000	30,000	22,000	22,000
7	산자부	산업기술인력양성	-	23,100	30,000	27,000
8	교육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	-	220,000	240,000
9	교육부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	-	-	30,000	45,000
10	교육부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	172,000	169,600	168,000	168,000
11	과기부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	-	-	35,000	8,000
12	산자부	지역협력연구센터(RRC)사업	25,480	29,150	28,779	26,000
13	교육부	지역대학우수수과학자지원사업	17,900	21,500	17,500	10,600
14	문광부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15,000	15,000	15,000	15,000
15	문광부	대구디자인 패션산업육성	-	-	500	500
16	해수부	해양생물연구센터 설립	-	1,000	2,000	3,500
17	환경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운영	3,905	4,800	6,400	6,400
18	정통부	소프트타운활성화 지원사업	13,736	13,957	15,160	15,160
19	정통부	지역S/W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6,859	6,694	4,494	4,494
20	농진청	지역연구기반조성	7,253	6,250	6,760	6,963
21	중기청	창업보육센터	27,067	19,676	26,880	15,000
22	중기청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38,102	34,120	39,120	42,100
23	중기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40,000	30,000	20,000	10,000



3. 지역혁신사업관리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및 방법

설문조사는 전국 14개 지역(5개 광역시, 9개도)의 지역혁신활동에 참여하는 관련자들, 특히 정부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였다³⁾. 구체적인 설문조사의 대상은 지역혁신활동의 주요 주체들로서 지역혁신사업을 지원 및 관리하는 기관인 지방정부 공무원, 공공연구기관 및 혁신지원기관, 지역대학의 교수, 지역소재 기업들을 포함하였다. 조사기간은 2005년 7월 21일부터 8월 21일까지이었으며, 총 800부의 설문서가 배포되어 100부가 회수되었다

4). 설문응답자 구성은 혁신지원기관 종사자와 벤처기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체 관련 응답자가 49%, 지방공무원, 대학교수, 지역공공연구기관, 혁신지원기관 등 비기업체 관련 응답자가 51%를 차지하고 있다⁵⁾.

〈표 3〉 직종별 응답자 구성

집단	직 종	응답자수	비율
비기업 51(51%)	지방정부 공무원	4	4%
	대학교수	5	5%
	공공연구기관	7	7%
	혁신지원기관	35	35%
기업 49(49%)	대기업	2	2%
	중기업	10	10%
	소기업	13	13%
	벤처기업	24	24%

2) 설문조사 내용 분석

설문조사 내용은 지역혁신사업 관리의 효율성과 관련한 여러 주제들을 중심으로 구성

되었다. 즉, 사업구조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중복성, 지역계획과의 적합성, 의사결정주체의 구성, 사업선정의 공정성, 사업자금집행의 투명성, 사업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가. 지역혁신사업 구조의 적정성

2004년 현재 중앙정부는 지역혁신사업으로서 9개 부처에서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총 23개 지역혁신사업들의 지원규모와 사업종류가 적정한가라는 설문 에 응답자들의 11%만이 지원규모와 종류가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56%는 지원규모가 확대되어야 하지만 사업의 종류는 정리가 필요하다, 14%는 지원규모는 적절하나 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비기업집단의 경우 사업의 종류가 많거나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0%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관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응답자들이 현재의 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고 정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지역혁신 지원규모와 사업종류의 적정성

구 분	비율
적절	11%
지원규모는 적절, 사업종류는 많음	14%
보통	8%
지원규모 확대, 사업종류 정리 필요	56%
새로운 사업전개 필요	7%
기타	4%

이것은 지역혁신주체들의 23개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인지수준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23개의 지역혁신사업 중 응답



자들은 평균적으로 8개 정도의 사업만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비기업 집단의 경우 인지하고 있는 사업의 수가 평균 10개로 나타났으나 기업집단은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의 경우 중기청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TIC사업, TP사업 등이 인지도가 높은 사업으로 나타났다.

나. 지역계획 및 역량과의 적합성

중앙정부의 지역혁신사업들이 지역의 혁신 계획에 의해 종합적으로 조정되어 추진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은 21%이었으며, 지역혁신사업이 지역의 혁신계획에 의하여 조정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높지 못하다는 의견은 53%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저 그렇다'와 '잘 안되고 있다'라는 응답도 24%를 나타냈다. 비기업 집단의 경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55%, 잘 안되고 있다는 응답도 18%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부부처의 지역혁신사업들이 지역계획과의 충분한 연계 하에서 추진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5〉 지역혁신사업의 지역혁신계획에 의한 조정

구 분	비율
조정 잘됨	21%
조정되고 있으나 실효성 없음	53%
그저 그렇다	13%
잘 안됨	11%
전혀 안됨	2%

해당 지역의 지역혁신사업들의 사업내용이 지역의 역량 수준과 니즈를 잘 반영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도 '잘 반영하고 있다' 12%,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63%, '잘 모르겠다' 12%,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반적으로 추진된다는 응답도 13%로 나타났다.

〈표 6〉 지역혁신 사업 내용의 적합성 정도

구 분	비율
잘 반영하고 있다	12%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63%
잘 모르겠다	12%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반적으로 추진된다	13%

다. 지역혁신사업의 상호보완적 관계

다양한 지역혁신사업들이 상호보완적 또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6%가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그저 그렇다' 혹은 '잘 안되고 있다'라는 응답도 50%로 나타나 다양한 지역혁신사업들이 지역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루어 시너지를 창출하는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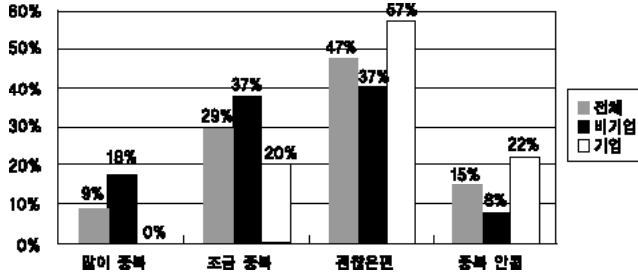
〈표 7〉 지역혁신사업의 상호보완성 및 시너지 창출

구 분	비율
잘됨	4%
비교적 잘됨	46%
그저 그렇다	35%
잘 안됨	15%

라. 지역혁신사업들의 중복성

지역혁신사업들의 중복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가 괜찮은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나, 많이 중복되거나 조금 중복된다는 의견도 38%로 나타나 지역혁신사업들이 유사성 또는 중복성이 상당히 있음을 나타

〈그림 2〉 지역혁신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인식



내고 있다. 특히 지역혁신사업의 종류와 현황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비기업 집단의 경우 중복된다는 의견이 55%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관리자들이 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상당히 높게 제시하고 있다. 중복된 사업들로는 대학의 인력양성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 등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중복성 지적이 많았다.

마. 지역혁신사업의 핵심 추진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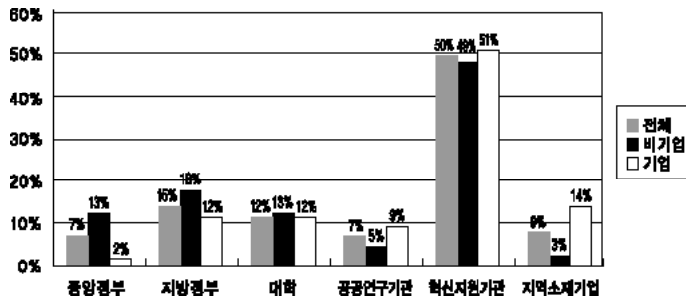
각 지역에서 정부의 혁신사업들에 참여하고 있는 혁신주체들 중에서 핵심적인 추진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50%가 정부부처의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혁신지원기관을 제시하였고, 지방정부 15%, 대학

12%, 중앙정부 7%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집단의 경우 지방정부와 함께 대학을 중요한 추진주체라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소재기업의 경우 기업집단들은 스스로를 핵심적인 추진주체로 인식하고 있으나 비기업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소재기업을 핵심적인 추진주체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가치사슬(value chain) 단계에 대한 지원의 균형성

혁신활동이 경제활동으로 성공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식창출활동이 실질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과 연계되어야 하는데, 지역혁신사업들이 가치사슬(value chain) 단계에 균형적으로 지원되고

〈그림 3〉 지역혁신사업의 핵심적 추진 주체에 대한 인식





있는가라는 질문에 ‘균형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5%, ‘비교적 균형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33%로 나타났으나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의견도 24%로 나타났다. 특히 비기업 집단은 34%가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 8〉 가치사슬(value chain)단계 지원의 균형성 정도

구분	비율
균형적	5%
비교적 균형적	33%
보통	37%
균형적이지 못함	24%
지나친 불균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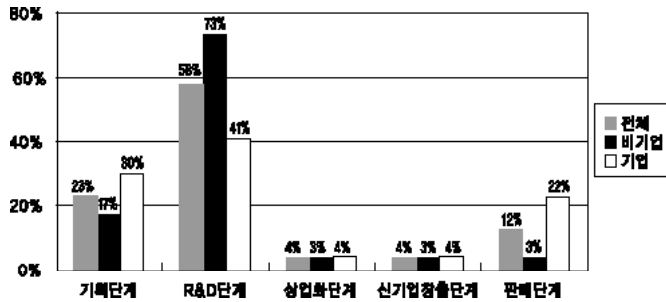
정부지원이 집중되는 단계는 연구개발단계(응답자의 58%)이며, 기획 및 전략적 자원배

분단계 23%, 신제품 개발 및 판매 1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원이 부족한 단계는 연구개발 결과의 이전 및 상업화(응답자의 40%), 신기업창출 및 혁신기업 유치가 29%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비기업집단의 경우 신기업창출 및 혁신기업 유치가 43%, 연구개발 결과의 이전 및 상업화가 36%로 나타났으나, 기업집단의 경우는 연구개발 결과의 이전 및 상업화가 44%로 높은 반면, 신기업창출 및 혁신기업 유치는 1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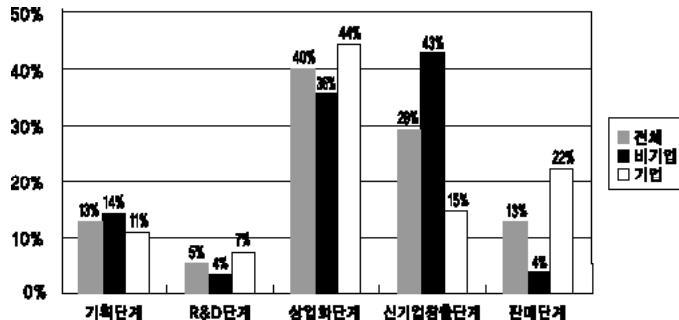
사. 지역혁신사업의 시장지향성 수준

지역혁신사업들이 시장지향적인 방향성을 갖고 추진되고 있는 가에 대해 시장지향적 또는 비교적 시장지향적이라는 응답이 61%,

〈그림 4〉 가치사슬단계에서 정부지원 집중 부문



〈그림 5〉 가치사슬단계에서 정부지원 부족 부문





‘그저 그렇다’ 23%, ‘시장지향적이지 않다’ 12%, ‘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추진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시장지향성을 추구하고 있으나 충분한 수준에서 시장지향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 지역혁신사업의 시장지향성

구 분	비율
아주 시장지향적	6%
비교적 시장지향적	56%
그저 그렇다	23%
시장지향적이지 않음	12%
전혀 시장 고려안함	3%

아. 기획과정의 합리성 및 적정성

사업의 기획단계에 해당 지역 기업의 니즈가 잘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57%가 ‘반영된다’, 28%가 ‘그저 그렇다’, 15%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함으로써 지역기업의 니즈가 반영되고 있으나 충분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기업의 잠재적 니즈의 반영에 대한 설문에서는 ‘반영한다’ 48%, ‘그저 그렇다’가 34%, ‘반영되지 않는다’가 18%를 차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50%를 넘고 있다.

〈표 10〉 지역기업의 니즈 반영 수준

구 분	비율
반영된다	57%
그저 그렇다	28%
반영되지 않는다	15%

사업기획 시 지역기업의 니즈가 잘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지역기업들의 관심이 낮기

때문’ 55%,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21%, ‘기업의 니즈는 참고사항일 뿐 사업의 기획과는 무관하다’ 19%로 나타났다.

〈표 11〉 지역기업 니즈 미반영의 수준

구 분	비율
기업의 참여기회가 적다	21%
참여기회는 열려있지만 지역기업들의 관심이 낮다	55%
참여기회는 있으나 기업의 니즈는 참고사항일 뿐사업의 기획과는 무관하다	19%
사업의 추진주체가 기업의 니즈에 대해 관심이 없다	5%

기획과정에서 혁신 주체들간에 상호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61%, ‘다양한 의견제시만 있을 뿐 결정은 별도 논리로 이루어진다’가 3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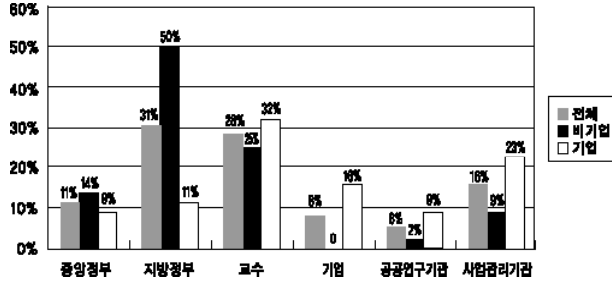
〈표 12〉 기획단계 의사결정의 합리성 수준

구 분	비율
잘 이루어지고 있다	3%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58%
다양한 의견제시만 있을 뿐 결정은 별도 논리로 이루어진다	31%
의견교환이 잘 안되고 특정 주체의 일방적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7%
기타	1%

해당 지역에서 사업기획 시 실질적인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 및 전문가 그룹이 구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 25%, ‘어느 정도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61%, ‘전문성보다는 지역에서의 영향력 보유 중심으로 구성된다’ 10%로 나타났다.



〈그림 6〉 기획단계에서 주요 의사결정주체



즉, 전문성 보유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전문가 중 기획단계의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혁신주체는 지방정부(31%), 지역대학교수(28%), 중앙정부(1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집단의 경우는 지역대학교수(32%), 사업관리기관(23%), 지방정부(11%), 중앙정부(9%)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혁신사업 기획 시 지역의 대학교수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집행관리의 효율성

사업의 집행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부처의 사업관리기관들의 역할 설정 및 연계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되고 있다’ 64%, ‘그저 그렇다’ 26%, ‘잘 안되고 있다’ 8%, ‘전혀 안되고 있다’ 2%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관리자들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수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68%, ‘그저 그렇다’ 20%, ‘전문성이 높지 못하다’

11%로 나타났다. 즉, 사업관리기관의 역할 및 전문성 수준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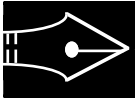
〈표 13〉 사업관리기관의 역할 및 연계 정도

구 분	비율
잘 이루어지고 있다	10%
비교적 잘되고 있다	54%
그저 그렇다	26%
잘 안되고 있다	8%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표 14〉 사업관리기관의 전문성 수준

구 분	비율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14%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54%
그저 그렇다	20%
전문성이 높지 못하다	11%
전문성이 전혀 없다	1%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선정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공정하다’ 79%, ‘그저 그렇다’ 18%, ‘공정하지 않다’ 2%로 나타났다. 사업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85%, ‘그저 그렇다’ 13%, ‘효율적으



〈표 15〉 사업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구 분	비율
공정하다	24%
비교적 공정하다	56%
그저 그렇다	18%
공정하지 않다	2%

〈표 16〉 자금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구 분	비율
효율적이다	23%
비교적 효율적이다	63%
그저 그렇다	13%
효율적이지 않다	1%

〈표 17〉 참여인력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

구 분	비율
높다	14%
비교적 높다	61%
그저 그렇다	19%
높지 않다	6%

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1%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질적 수준에 대하여는 '질적 수준이 높다' 75%, '그저 그렇다' 19%, '수준이 높지 못하다' 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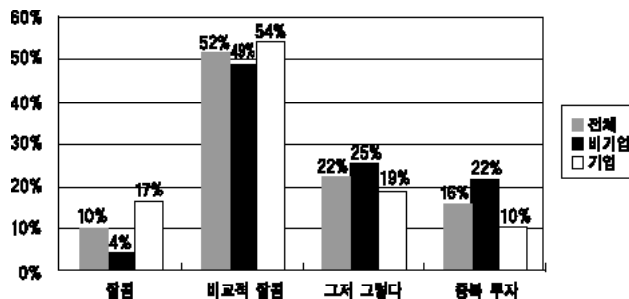
정과정의 공정성, 자금관리의 투명성, 참여인력의 질적 수준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부정적인 평가도 약 20% 수준에 달해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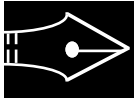
지역혁신사업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는 적절히 투자되어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해 '잘 되고 있다' 62%, '그저 그렇다' 22%, '다소 중복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16%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비기업집단의 경우 다소 중복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22%). 이러한 것은 고정자산 투자의 중복 현상이 높고 관리의 효율성이 개선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차. 평가의 합리성 및 적합성

지역혁신사업들의 결과평가 실태에 대해 '평가가 잘되고 있다' 62%, '일부 사업들만 평가를 하고 있다' 17%로 나타났다. 평가된 결과는 차기 사업의 기획 및 집행에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비교적 반영되고 있다' 40%, '잘 반영되고 있다' 25%, '잘 모르겠다' 3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혁신사

〈그림 7〉 시설 및 장비 관리의 효율성





업들의 사업결과에 대해 결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가결과의 반영은 잘 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18〉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결과평가

구 분	비율
잘되고 있다	62%
일부 사업들만 평가	17%
잘 모르겠다	19%
잘 안되고 있다	2%

〈표 19〉 평가 결과의 반영수준

구 분	비율
잘 반영된다	25%
비교적 반영된다	40%
잘 모르겠다	34%
잘 반영되지 않는다	1%

해당 지역에서 수행 중인 사업들의 성과에 대하여 지역차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잘되고 있다’ 39%, ‘일부 사업들만 평가를 하고 있다’ 34%, ‘잘 모르겠다’ 25%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의 평가와 관련성이 높은 비기업집단의 경우 일부 사업만을 평가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49%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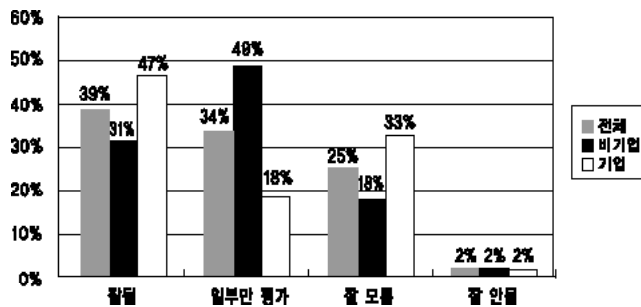
나타났다. 즉, 지역차원에서의 사업들에 대한 결과평가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카. 지역의 지역혁신시스템 역량

지역혁신시스템의 역량과 관련된 요소들 중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지역혁신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전략적 접근 등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혁신기업의 유치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금융 및 마케팅 지원체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체들은 대학의 혁신역량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역혁신시스템의 가치사슬(value chain) 형성 수준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다’ 41%, ‘그저 그렇다’ 38%, ‘잘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18%로 나타났다. 가치사슬 단계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문으로는 연구개발 결과의 이전 및 상업화가 38%, 신기업 창출 및 혁신기업 유치와 신제품 개발 및 판매가 각각 20% 순으로 제시되었다. 응답자

〈그림 8〉 지역혁신사업 성과에 대한 지역차원의 평가실시





〈표 20〉 지역혁신시스템에서 우수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 순위

지역혁신시스템의 우수한 부분		지역혁신시스템의 부족한 부분	
순위	부 분	순위	부 분
1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	1	혁신기업의 유치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2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2	금융 및 마케팅 지원체계
3	지역혁신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전략적 접근	3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
4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	4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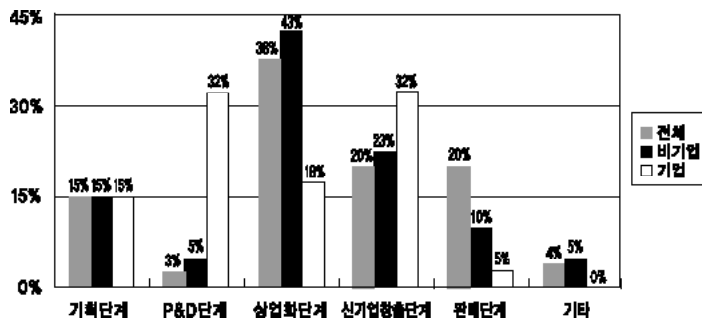
집단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났는데 비기업집단의 경우는 연구개발 결과의 이전 및 상업화가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제시하였으며, 기업체들은 연구개발 결과의 이전 및 상업화와 신제품 개발 및 판매부문이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표 21〉 가치사슬의 형성 수준에 대한 평가

구 분	비율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다	41%
그저 그렇다	38%
잘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18%
전혀 형성이 안되어 있다	2%

지역의 주요 혁신주체의 혁신역량에 대한 평가에서는 (아주 낮다 1점~아주 높다 5점) 혁신지원기관이 3.6점, 중앙정부 3.2점, 지방정부와 기업체 3점, 공공연구기관 2.8점, 대학 2.6점의 순으로 나타나 대학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혁신역량 제고가 가장 필요한 주체는 지방정부(27%), 대학(21%), 혁신지원기관(19%), 지역소재기업(16%), 공공연구기관(10%), 중앙정부(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체들은 대학(25%), 혁신지원기관(20%)의 순으로 혁신역량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어 지역기업들의 대학 및 혁신지원기관의 혁신역량 제고에 대한 요구가

〈그림 9〉 개선되어야 할 가치사슬 단계 부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 주요 혁신주체의 혁신역량에 대한 평가

구 분	평점
대학	2.6
중앙정부	3.2
지방정부	3.0
공공연구기관	2.8
혁신지원기관	3.6
기업체	3.0

다. 지역혁신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지역혁신사업들이 본래의 사업목적과 추진 전략대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이행되고 있다’ 7%,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다’ 68%, ‘그저 그렇다’ 22%, ‘잘 안되고 있다’ 3%로 나타나 비교적 사업 추진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표 23〉 지역혁신사업의 목표 충실성 정도

구 분	비율
잘 이행되고 있다	7%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다	68%
그저 그렇다	22%
잘 안되고 있다	3%

해당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혁신사업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비교적 성과가 높다’ 62%, ‘그저 그렇다’ 30%, ‘성과가 높지 못하다’ 6%로 나타나 성과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아주 높다는 응답은 2%에 불과해 성과가 보다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성과측면에서도 유사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성과가 지역산업 및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경제성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15%, ‘비교적 기여를 하고 있다’ 55%, ‘그저 그렇다’ 26%, ‘기여하지 못하다’ 4%로 나타났다.

〈표 24〉 지역혁신사업의 종합성과에 대한 평가

구 분	비율
아주 높다	2%
비교적 높다	62%
그저 그렇다	30%
높지 못하다	6%

〈표 25〉 지역혁신사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

구 분	비율
많이 기여하고 있다	15%
비교적 기여하고 있다	55%
그저 그렇다	26%
기여도가 높지 못하다	4%

4.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가. 사업구조의 조정 필요

설문에 응한 지역의 많은 혁신주체들은 현재의 사업구조가 복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사업간 중복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더구나 2005년도에는 사업수가 더욱 증가하여 11개 부처 34개 사업으로 사업수가 증가하였다. 정부는 일부 부처 내 사업들을 통합하여 27개 사업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유사사업들에 대해서는 연계 강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조정된 사업의 수는 적정관리범위를 넘는 상당히 많은 수이며 부처간 유사사업의 연계추진도 실제로 효과적으로 추진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부처 내 사업 통합 및 조정을 넘어서 부처간 유사사업에 대



해서도 통합 및 조정을 통해 사업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평가를 통해 성과가 낮은 사업, 사업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을 전환하거나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시장지향성 강화 필요

설문조사에서 지역혁신사업들이 비교적 시장지향적인 방향성을 갖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지역 기업의 니즈 반영수준이 그다지 높지 못하며 가치사슬단계에서 연구개발단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상업화단계에 대한 지원이 낮다는 점, 그리고 지역소재 기업이 지역혁신사업의 핵심적인 추진주체로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기획 시 기업보다는 대학교수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혁신사업들을 목적별로 구분했을 경우 대략적으로 지역의 혁신역량 증대가 70%, 중소기업 핵심역량 증대가 30%로 구분되고 있어 기업중심이라기보다는 지역대학 등의 역량확보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혁신사업이 보다 실질적인 시장지향적인 추진구조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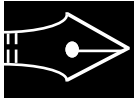
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조정 필요

설문조사에서는 중앙부처의 지역혁신사업이 지방정부의 혁신계획, 지방의 혁신역량 및 니즈 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이

추진되거나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편이성에 의해서 획일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간섭에 의해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것은 현재 지역혁신사업 관리주체 및 관리상의 역할과 기능에서 다소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현재 지역혁신사업 추진 및 관리 지배구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구조를 설정하고 사업관리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지에 대한 합의와 구체적인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라. 사업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

설문 응답자들은 사업집행단계에서 기획과정의 합리성, 사업자금 집행의 투명성, 사업성과의 효과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설문결과가 타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날 경우 정부의 사업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실제 현황보다 높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시설 및 장비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중복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도 상당수 제시되고 있어 고정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다.



5. 맺음말

본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지역혁신사업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지역혁신주체들의 평가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개별사업의 문제점 및 성과에 대한 정보보다는 전체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혁신사업들에 대한 정책 연구들은 대부분 개별사업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추진되는 사업수가 수십 개가 되는 상황에서 전체사업들에 대한 조정과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인 정책추진은 지역혁신정책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주】

- 1) 2004년도 지역개발사업계정에 속한 사업은 132개 사업이며, 대부분 시설정비 및 건설, 도로건설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지역혁신사업계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크다.
- 2) 참고자료: 2002~2004년은 산업기술평가원의 사업별 예산현황 자료 참조, 2005년은 2005년도 균특회계 운용개요, 기획예산처, pp. 12~18 참조.
- 3) 설문서 배포대상에 대한 자료는 산업기술평가원과 각 지역의 전략산업기획단의 협조로 수집되었다. 설문대상은 산자

부 이외의 여러 정부부처사업 관리자 및 참여자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 4)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서는 정부의 지역혁신정책 및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지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응답자 100명은 적은 규모이지만, 실제로 응답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관심과 전반적인 이해수준이 높은 응답자들 100여명의 의견은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의미있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응답자 100명이 여러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에도 정부사업관련 동일한 설문에 대해 응답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응답자의 대표성도 확보될 수 있다.
- 5) 본 연구에서는 기업집단과 비기업집단 간의 의견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기업집단으로 지방정부 공무원, 대학교수, 공공연구기관, 혁신지원기관은 비기업집단으로 구분된다.